민주, '난방비 폭탄'에 "7.2조 원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제안"

이재명 "빠른 시일 내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어야"
경기도, 200억 투입해 난방취약계층 난방비 집중 지원
기초지자체 재정 감안해 100%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
남종섭 "에너지 취약계층 예산 집행 된다면 적극동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도시가스요금이 전년 대비 38.4%가량 상승한 가운데 '난방비 폭탄'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를 실시하고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서울·경기 지자체장들과 함께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현안을 청취·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등과 관련해 전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에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에 민주당에서는 '핀셋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30조 가량의 정부지원, 즉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물가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에너지·물가 인상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광역정부를 대표해 자리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난방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을 비롯한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 집중 지원계획을 밝혔다.

염 부지사는 위 내용을 언급하며 "총 200여억 원을 즉시 투입해 41만 2000여 분의 도민과 6220개 시설에 따뜻한 공기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지자체 재정 형편을 감안해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해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100% 경기도 예산으로 하겠다"며 "기존 난방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긴급복지핫라인을 통해 난방위기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종섭 광역의원협의회 회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경기도가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만약 예산이 집행된다면 의회가 적극동참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중앙정부를 향해 "현 상황을 재난이라고 인식하고, 재난 상황으로 선포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 선포 전제하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의 취약계층 지원금 확대 방안과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대상에게 5만 원·10만 원의 선택적 복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한별 기자

"취약계층에 가스비 할인·에너지바우처 확대"

대통령실,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
지원금 15만 원에서 30만 원 확대
가스공사, 160만 가구 가스요금
기존 할인 폭 2배로 대폭 인상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는 올 겨울 한시적(1~3월)으로 지원금 15만 2000원→3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올 겨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2022 요금에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 집중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적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한별 기자

비용 줄이고 선택의 폭 확대 골자

이탄희, '대선거구제' 발의 추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시정)은 정치 다양성 확보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으로 나눠 4~7인씩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담겨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 결정된다.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하고, 소선거구에 비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용이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늘어난다.

유권자가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후보자 방송 정책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기존 1회 이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방송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해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핵심인 유세차·선거운동원 등을 정책토론 대체로 유도, 대선거구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를 상쇄한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첫 법정시한 한 달 전인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기구인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돼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해 1달 간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탄희 의원은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와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다.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김한별 기자

